

전남에 전국 최대 규모 스마트팜 단지 들어선다

고흥·장성·신안 등 7개 시·군에 1451억원 투입...청년농 유입 기대
농어촌공사 전남본부, 임대형 스마트팜 확대...초기 투자 부담 감소

정부가 이상기후에 따른 농산물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해 전남 7개 시·군에 전국 최대 규모의 스마트팜 단지를 구축한다.

여름철 폭염·장마 장기화 등 기후 위기로 인한 자원 부족과 식량 공급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면서 전통적인 농업에서 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농업으로의 전환이 가속된 데 따른 것이다.

지역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전남은 스마트팜 도입으로 농산물의 생산성·품질 제고는 물론 청년농 유입 등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까지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7일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고흥을 중심으로 장성, 신안, 영암, 강진 등 7개 시·군에 총 사업비 1451억원을 투입해 전국 최대 규

모의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한다.

이번 사업은 농산물 수급 안정 및 노동력 절감, 자원 효율화, 비용 절감, 환경 보호, 식량안보 등을 목표로 하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스마트농업 인프라 구축 사업' 중 하나다.

특히 전국에서도 최대 규모의 농지를 관할하고 있는 전남지역본부는 전체 스마트팜 보급 면적의 32%를 담당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6월에는 세계 최초로 무인 운영되는 스마트팜 시설인 '나주시 첨단 무인자동화 시범단지' 구축을 완료했다.

또 올 9월에는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33.4ha)'를 준공했다. 특히 고흥군은 스마트팜 조성 사업의 핵심 지역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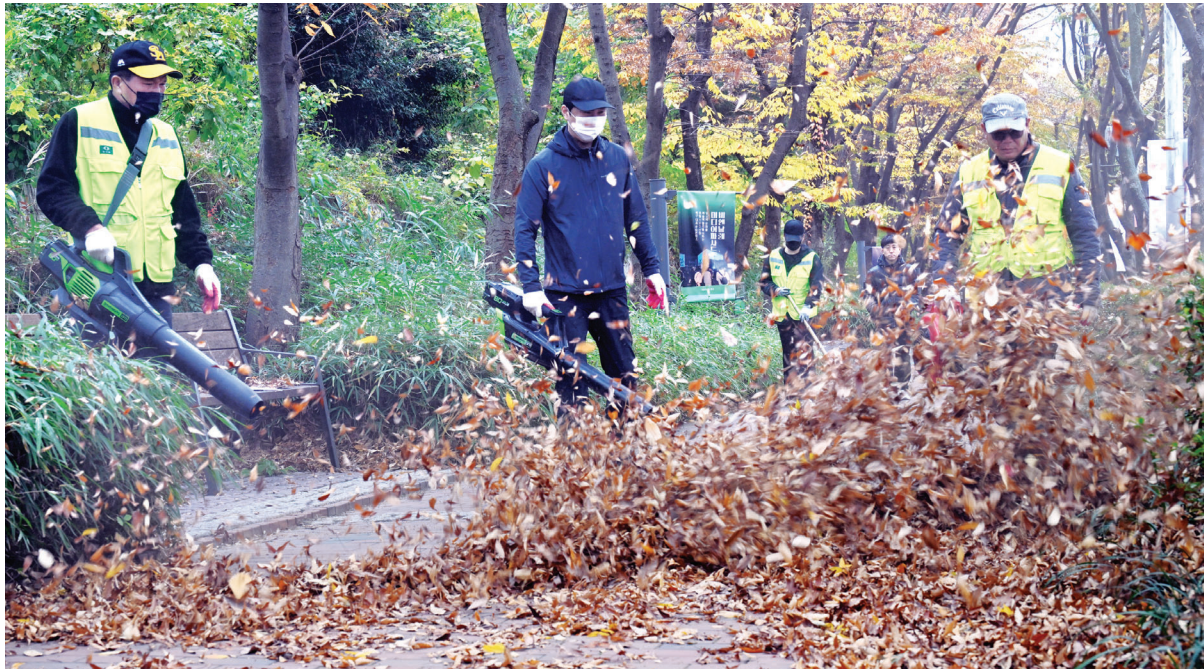
에도 107억원을 투입한 '고흥·신안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 조성 사업(16.6ha)', 125억원 규모의 '고흥 스마트축산 ICT(19.1ha)'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전남에서는 '장성 스마트농업 육성단지(391억원·12.9ha)', '신안·영암 지역 특화형 임대형 스마트팜(448억원·15.4ha)', '강진·영암 청년농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18억원·0.7ha)' 등 지역 여건과 맞는 스마트팜 사업을 추진하고 '스마트 농업 메가 클러스터'를 구축 중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스마트팜 구축 사업을 시작으로 청년·신규 농업인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을 확대해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김재식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장은 "전남은 전국 최대 농업지역으로, 농가 소득 향상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미래형 스마트 농업 발전에 앞장서겠다"며 "이를 통해 청년이 돌아오고 지역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가로수 길 낙엽 수거

17일 광주 북구 운암동 예술의전당 후문 가로수길에서 북구청 청소행정과 기동반 직원들이 낙엽으로 인한 배수로 막힘 현상 방지를 위해 전통 송풍기를 이용해 인도에 수북이 쌓인 낙엽을 치우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

일상 속 건강 챙긴다...광주형 통합 건강돌봄 체계 안착

통합건강센터, 334명 정기 등록

광주시가 '예방·치료·연계'를 아우르는 통합 건강돌봄 모델을 안착시키고 있다.

통합건강센터 시범사업부터 원스톱 응급의료플랫폼, 공공심야·달빛어린이병원 등으로 이어지는 공공의료망이 시민 일상 속에서 본격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평가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동구·서구 통합건강센터에는 10월 31일 기준 334명이 등록해 정기관리를 받고 있다.

등록자 중 71%인 235명이 65세 이상으로, 고령층의 만성질환 관리체계가 구현되고 있는 것이다.

시는 보건소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통합건강센터 6곳을 운영 중이며, 시범평가를 거쳐 점차 확

대할 방침이다.

통합건강센터는 개인별 건강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 모니터링과 전문상담을 결합해 '예방 중심' 관리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문을 연 '사회적 처방 건강관리소' 2호점(광산구 빛고을국민체육센터)은 운동 동행, 일상 대화 등 비의료적 처방을 병행해 우울·고립 위험군의 건강회복을 돕는다. 광주다움 통합돌봄과 연계해 동네 기반의 '활력 회복' 모델을 확산하는 교두보 역할을 한다.

일명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구조적으로 완화할 '원스톱 응급의료플랫폼'이 12월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환자 중증도, 응급실 병상, 의료자원 정보를 실시간 공유해 이송 지연과 전원 혼선을 줄이는 시스템이다. 구급대·응급실·전문의 간 정보 흐

름이 단일 플랫폼에서 이뤄지면서 현장 판단의 정확도와 대응 속도도 높아질 전망이다.

야간·휴일 시간대 소아진료 공백을 메운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과 달빛어린이병원은 올해 이용 환자가 6만명을 넘어섰다.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이 모델은 여수·군산 등 타 지자체로 확산하고 있다.

시는 통합건강센터·사회적 처방·응급의료플랫폼·야간 소아진료로 이어지는 연계축을 체계화해 '예방·조기개입·치료·회복'의 전 흐름을 지역에서 완결하는 모델을 창출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층·만성질환자 관리와 취약시간대 대응을 우선 보완하고,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지방정가 라운지

“아이들 건강이 우선...학교 석면 철거 서둘러야”

최지현 광주시의원 촉구

광주시교육청의 학교 석면 해체·제거 사업이 예산 미확보를 이유로 지연되자 “학생·교직원 건강권을 외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최지현(광산 1선거구) 시의원은 17일 5분 자유발언에서 “광주 초·중·고 다섯 학교 중 한 학교가 여전히 석면 해체 대상”이라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1군 발암 물질로 규정한 석면을 두고, 예산을 사유로 공기를 미루는 것은 시민의 생명·안전권을 경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청은 2026년 전량 제거 계획을 세웠지만 최근 일정을 2027년으로 연장했고, 올여름·겨울 방



학에 예정됐던 24개 학교 공사를 대부분 보류한 채 삼정·송우·점단초 3개교만 겨울방학에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석면 해체 대상은 중학교 91개교 중 21개교(23.1%), 초등학교 155개교 중 31개교(20.0%), 고등학교 66개교 중 13개교(19.1%)로 나타났다.

그는 “석면 철거는 여름보다 공기와 밀폐·음압 관리가 유리한 겨울방학이 적기”라며 “이번 겨울에 사업이 또 미뤄지면 내년 물량이 한꺼번에 몰려 부실·졸속 시공 위험이 커진다”고 경고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여수해양박람회 특구 세금 감면 연장 조례안 가결

강문성 전남도의원 대표발의

여수해양박람회 특구 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 혜택이 2년간 연장된다.

17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 395회 제 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강문성(민주·여수3)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개정 조례안에는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지역자원시설세 전액 면제, 박람회 특구 내 창업·신설 기업 부동산 취득세 50% 감면, 사업시행자의 고유업무 사용 부동산 취득세 50% 감면 등을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된 조례안은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추진 중인 국제전시·컨벤션센터 조성 등 박람회장 사후활용 사업의 재정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 의원은 “박람회장 자산이 여수광양항만공사로 이관된 이후 공공주도 사후활용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다”며 “전남도 세금 감면 연장은 공사가 재정 여력을 갖고 중장기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또 “감면 제도가 민간투자 유치에도 긍정적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목포·순천대 통합 조속 승인...전남 의대 설립해야”

정영균 전남도의원 촉구

전남도의회가 목포대와 순천대의 '유연한' 통합과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17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395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정영균(민주·순천1)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 연합형통합대학교 및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을 원안 의결했다.

건의안은 교육부가 순천대와 목포대 통합을 조속히 승인할 것과 전남 통합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의 골자는 두 대학이 캠퍼스 별 충장을 두는 '연합형 통합대학교' 설립이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당 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이 발의한 '국립 전라남도 연합형통합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 특별법안'과 서미화(민주·비례) 국회의원이 발의한 '국립 전남통합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 특별법안'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정 의원은 “두 대학의 통합은 단순한 지방 현안 이 아니라,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미래와 의료체계 확립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정부는 실질적이고 결단력 있는 정책 집행으로 전남의 국립대학 통합을 조속히 승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2025 장성 방문의 해

장성군 Jangseong

천년고찰 백양사(쌍계루)

장성이 보내온 힐링 초대장